

## 2019년 안전감찰 활동 기본계획 수립

조 성(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책임연구원, cksaint@cni.re.kr)

### CONTENTS

1. 서론
2. 안전감찰 기본계획 개요
3. 재난안전 환경진단 및 대형사고 원인분석
4. 안전부패 실태분석
5.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6. 추진과제 및 선도사업
7. 결론

### 요약

- 안전 환경 진단과 대형사고 원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도가 2019년 안전감찰활동을 위하여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목표에 따른 전략과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급증하고 있는 대형사고의 원인에는 첫째,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 및 감독 부실, 둘째, 안전관련 시설·장비 투자 및 안전의식 부족, 셋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의 관행화, 넷째, 재난관리에 임하는 정부기관의 소극적 대처, 다섯째, 비리와 부실이 정상이 사회 풍조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됨
- 안전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으며, 안전을 해치는 불법관행을 근절한다는 방향 하에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패유발 구조를 추적하여 도민의 안전감수성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이라는 목표를 설정함
- 목표 실현을 위하여 세 가지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각 두 가지의 실행과제를 제안함
  - －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직거래 유도
    - ① 중소규모 건설사업자 안전관리 소홀 및 하도급 부정부패 감찰
    - ② 재난발생 시 비상근무 매뉴얼 불이행 감찰
  - － 안전에 우선하는 이익 방지
    - ① 어린이, 아동, 노인, 장애인 생활시설 안전관리 소홀 감찰
    - ②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단속
  - － 안전을 위협하는 토착형 비리 근절
    - ① 해수욕장 안전무시 관행 단속
    - ② 재난안전 사업에 지역토착형 비리 집중 단속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정의 방침에 부응하고, 안전취약계층으로써 어린이안전을 우선하고자 어린이 생활공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함

# 01 서론

##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행정안전부가 안전감찰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안전 분야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분야별 안전부패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sup>1)</sup>
- 안전부패는 행위주체별<sup>2)</sup>로 유발되어, 분야별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유형 도출·분석 및 제도 개선 등 반부패 추진기반 마련 필요
- 정부차원의 역량을 집중한 안전부패 발굴 등 ‘안전분야 범정부 반부패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내실 있는 조사가 요구되며, 안전 분야가 광범위하고 안전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역량을 결집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임

## ●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안전관리 체계, 안전 점검 실태의 진단을 통하여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2019년 충남도가 시행하고자 하는 안전감찰의 기본 방향과 목표 및 전략에 따른 실행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점과제 선정 및 부패유발 구조를 파악하여 도 차원의 감시역량 결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1) 지난 10년간 안전에 관한 규제가 계속 완화되어 온 것에 대하여 현재의 안전규제가 적합한지, 보다 강화될 필요는 없는 지 등 안전규제의 적합성에 대한 점검 지시(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18. 4. 18 대통령지시사항)

2) 인·허가권자(관),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 안전점검·인증 업체 등

## ● 연구의 범위

- 조사 범위는 도 전역에 걸쳐 저가 완전관리와 같은 공통분야, 건축·소방 등 개별 안전 분야 및 안전 분야 갑질 등 생활적폐 분야를 포괄함
- 조사 분야는 기관별 감사사례(안전비위 등), 실제 사고사례, 언론 등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분야 외에 주민 참여 등 의견청취를 통해 도출된 분야를 망라함

## ● 연구의 기대효과

- 2019년 첫 시행되는 안전감찰 업무의 기본 테마를 설정함으로써, 건축, 산업, 식품안전 등 안전 분야 전(全)영역에서 고질적 안전부패 사례를 발굴·개선하는데 기여함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불공정 갑질 행위 등 안전 분야 생활적폐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완화의 미명하에 각종 안전규제를 탈법·편법으로 회피, 완화, 폐지하는 사례에 대한 적발을 내용으로 하여 도민 생활의 실질적 안전 확보에 기여함

## ● 연구의 정책활용

- 이 연구 자료는 역점 시책화 및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제언, 워크숍 등 대외발표와 안전감찰 시행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됨
- 안전분야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안전감찰 시행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관련제도 정비에 활용됨

## 1. 일반사항

### ● 수립배경

-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 분야의 불법행위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근절이 필요함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불공정 갑질 행위 등 넓은 범위의 안전 분야에서 안전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많으며, 안전 분야의 생활적폐가 만연한 상황임
- 안전 분야의 불법행위는 사고를 유발하며,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됨
- 10년간 안전에 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현재 안전규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취약분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안전부패를 방지하고 안전관리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안전신뢰를 높이기 위함

### ● 법적근거

- 헌법 제34조6항(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노력 의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기관경고·징계 등을 요구하여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제77조(재난관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행정안전부 직제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에 의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예방조치, 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쏴 단계에 걸친 안전감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성격

- 안전관리체계, 안전점검 실태 등을 심층 진단으로 안전부패 대책 수립
- 안전규제를 탈법·편법으로 회피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사례를 발굴하여 안전관리의 합리적 대책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등의 경고 및 징계 등 처분 조치

## 1.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원인 변동

-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적, 기술적, 사회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자연적 위험은 자연현상의 급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 기술적 위험은 건물이나 교량의 붕괴, 공장의 폭발, 오염 등 인공적 산물이나 기술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사고
  - 사회적 위험은 사기, 절도, 방화, 폭력 등 순수하게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비롯되는 사건과 관련됨

### (1) 사회시스템의 변화

- 위험이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것에서 비롯되던 전통사회에서와는 달리 오늘날의 위험은 기술-사회적인 성격을 가지며, 기술적 장치나 시스템의 실패뿐만 아니라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는 정치, 사회, 경제시스템의 실패로부터 발생함

### (2) 기술수준 및 산업구조의 변화

- 세계화·도시화·기술화 등으로 신종 재난이 증가함
  -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과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신종재난의 증가
  - 신종 인플루엔자(2009년), 구제역(2010년), 에볼라(2014), 금융사기, 사이버테러 등

- 전기·가스 등 에너지 시설의 밀집에 따른 복합재난 및 산업화에 따른 특수재난(유해화학물질, 대규모 정전) 증가

### (3)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의 변화

- 항공·선박·기차 등 고위험 내재적 이동수단의 사용 증가, 등산·해양스포츠·축제 등 위험이 내재된 활동 증가
  -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비율이 확대됨
  - 여가문화생활을 중요시 하는 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사고발생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짐

## 2. 대형사고 원인 고찰

- 과거 대형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재난관리 전(全)단계에 걸쳐 유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됨
  - ○ 과거 대형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재난관리 전(全)단계에 걸쳐 유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1)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감독 부실

- 부적절한 안전관련 규제 및 처벌규정의 미흡
  - ('14년 세월호 사고) 선령제한 완화(당초 20년 → '96년 25년 → '09년 30년)로 선박 노후화가 심화되었음
  - 여객선 안전관리 규정 위반 시 벌금이 3백만 원에 불과하여 안전을 비용과 맞바꾸는 결과를 낳게 됨
- 형식적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감독체계 부적절
  - ('95년 삼품백화점 붕괴)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진단 미 실시, 형식적 감리 시행
  - ('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 직전까지 유독물 영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미 실시
  - ('14년 세월호 사고) 해운조합의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감독업무 수행

## (2) 안전관련 시설·장비 투자 및 안전의식 부족

- 다중이용시설이나 민간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설비 투자가 부족함
- 안전모와 같은 안전보호 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식이 부족함
  -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전동차 내장재가 PVC,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로 설치
  - ('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현장에서 중화제 미비치 및 작업자 보호 장비 미착용

## (3)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의 관행화

-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화재발생, 연기확산에도 기관사가 대피방송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음
- ('14년 세월호 사고) 감독기관의 부실, 선장 및 항해사의 선박관리 의무 및 승객 보호 의무 위반 등 다수 사례 발생

## (4) 재난관리에 임하는 정부기관의 소극적인 대처

- 재난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 업무기피현상 등으로 재난관리 전문성 부족 및 효율적 재난관리에 어려움 초래
  - ('11년 우면산 산사태) 우면산 산사태 시 서초구의 경우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아 피해를 입음
- 상당수 매뉴얼이 포괄적 내용만을 담고 있어 실제 재난상황에서 적용상 한계가 있고, 근무자의 매뉴얼 숙지훈련이 부족함
  - ('11년 우면산 산사태) 산림청이 산사태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공하였으나, 지역실정 등이 고려되지 않아 등 실제상황에서 활용 불가
  - ('12년 구미 불산 누출) 구미 산업단지 전체에서 사고이전 3년간 재난대비 훈련은 총 5회, 517명 참여에 그침 (전체 입주업체 600개, 고용자 83,000명)
- 재난현장과 상황실간, 중앙안전상황실과 소방상황실간의 신속한 상황전파가 되지 않아 초동대응 실패 사례가 발생함
  -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발생 이후, 시민들의 반복적인 신고와 제보에도 불구하고 잠수부



투입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어 구조구급에 실패

- ('14년 세월호 사고) 해경의 사고 접수(8:58분경) 이후 중앙안전상황실에 대한 보고가 지연, 중앙안전상황실은 언론을 통해 사고발생 최초 인식(09:19)한 바 있음

#### (5) 비리와 부실이 정상인 사회 풍조

##### ● 대형참사 책임 및 관련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

- ('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292명이 과적·과다 승객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나, 안전점검일지 허위작성 및 과적증거 서류를 인멸한 군산항만청 공무원 4명은 전원 집행유예
-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32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붕괴위험가능성 경고 보고서를 조작한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1명만 1년 6월 실형선고, 다른 공무원 8명 전원 집행유예
-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502명 사망한 사고에서 기소된 공무원 12명 가운데 뇌물수취 2명만 실형

## 04 안전부패 실태분석

### 1. 지적되는 안전부패 실태

–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난 안전부패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시각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관리 부적정

–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후천적 시각장애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 실시에서 일부 시각장애인이 숫자배열이 고정된 시력검사표를 외워서 검사를 통과해 교통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지적됨

#### ● 화물, 특수차량 및 덤프트럭 최고속도제한장치 사후관리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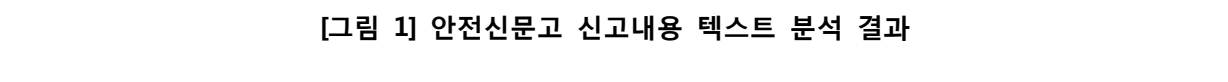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는 화물, 특수차량(3.5톤 초과)과 덤프트럭에 최고속도가 90Km/h를 넘지 않도록 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도 경찰청으로부터 과속단속정보를 제공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이 지적됨

#### ●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적정

– 항만에 보관 및 저장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가운데, 텐진항 폭발사고 원인물질인 “시안화나트륨”과 구미 불산누출사고의 원인물질인 “플루오린화수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음

– 항만내에서 하역과 운반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유인데, 이로인해 일반야적장에 화물컨테이너와 함께 위험물질이 혼재되어 보관된 문제가 발생해 감사에 지적됨

보통 보호구역 깨지다 합물 놀이터



- Issue Report ■ 11

### 3. 도민의견수렴조사 결과

- 2016년 6월~8월 기간 중 도민 93명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질적분석 한 내용에 따르면, 첫째, 안전 불감증이 주민들에게도 여전히 만연해 있는 점, 둘째, 위험관리 비용에 대한 인식이 경제논리에 입각해 있는 점, 셋째, 법 망을 피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면서 위험을 유발하는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었음
  
- 안전 불감증은 일련의 대형 사고발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함
  - “유람선 차량고박 하지 않음”
  - “1톤이하의 안함, 5톤 이상의 경우에도 ‘하다마’만 친다 ”
  - “어선의 경우는 자동주행장치를 설정해놓고 사고가남.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음”
  
- 안전에 대비하는 비용을 경제적인 논리에 맞추어 생각하다보니, 위험관리 비용을 낭비로 인식하고, 위험관리의 부담을 약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 “위험한 공정은 외주화 한다. 협력업체에서 외주를 맡고, 숙련도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을 투입한다. 취약하다. ”
  - “방진마스크를 정규직은 1등급을 주는데 비정규직은 2~3등급을 준다. 크레인을 주는데 유선 리모콘을 줘서 크레인 사고가 난다. 노동자가 사측에 얘기를 했는데도.... ”
  - “수련시설 외부강사 채용”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외주”
  - “정기훈련은 자체적으로 해요(다중이용시설)”
  - “교육도 전직원 아침조회시간에 백화점 직원들 하는거죠 자체적으로 하는거예요”
  - “석탄이송시설에서 공정 중에 하청노동자들이 사고를 입는다. 건설중인 발전기에서도 사고나고, 굴뚝에서 작업중에 떨어지는 사고가 난다 ”
  
- 법이 불비하거나 사각지대인 틈을 이용해서 위험을 통해 이익을 추구함
  - “안전규정이나 펜스 관련 조항에서도 연안사고 법률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음”

# 05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1. 기본방향

- 안전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으며, 안전을 해치는 불법관행을 근절함
  - － 비용의 감축이나 관행상의 편의로 인해 자행되어온 생활 속의 안전위협요소와 불법을 용인하는 부정부패 요인을 발굴하고 시정함
- 건축, 산업, 소방 등 안전 분야 전 영역에서 고질적 안전부패 사례에 대해 지도 단속함
  -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불공정 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적폐에 대한 단속 실시

### 2. 목표

-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를 수행하고, 부패유발 구조를 추적하여 감시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민의 안전 감수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 3. 추진전략

(1)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직거래 유도

-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도민이 지닌 위험인식 특성을 바탕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소통은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중 중요한 요소가 됨

- 안전감찰 활동은 소통의 전제가 되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도가 도민으로부터 실질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생활속의 안전불감증과 안전비용의 전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는 과정임

## (2) 안전에 우선하는 이익 방지

-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한 사회적 각성을 불러올 수 있도록 안전이 그 어떤 경제적 이익 보다 우선하여 다루어져야 하는 가치임을 실현하여야 함
- 특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중의 안전을 해하는 것은 도덕적인 해이에 기반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과정이 필요함

## (3) 안전을 위협하는 토착형 비리 근절

- 뿌리 깊은 지역사회의 관행으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만연한 토착형 비리는 자치단체와의 금전관계 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된 고리를 통해 안전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됨
- 이 같은 토착형 비리는 사익의 추구하고 함께 인간적인 결속으로도 이어져 지역사회 내 각종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불법의 연대로 이어져 발견과 처벌이 매우 어려움
- 따라서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안전부패 방지 및 목인을 차단함

## 06

## 추진과제 및 선도사업

### 1. 추진과제

#### (1)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직거래 유도

##### 실행과제 ① 중소규모 건설사업자 안전관리 소홀 및 하도급 부정부패 감찰

-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소홀이 향후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비해 중소규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가 강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비용을 이유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발생 함
- 또한 하도급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발견되고, 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문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등의 사례가 향후 건축물 안전으로 이어지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이에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실행과제 ② 재난발생 시 비상근무 매뉴얼 불이행 감찰

- 일처리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안전을 무시하는 업무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함
- 특히 재난 상황하에서는 대응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대응의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비상근무자의 태도를 감찰하여 감독하는 것이 요구됨

## (2) 안전에 우선하는 이익 방지

### 실행과제 ① 어린이, 아동, 노인, 장애인 생활시설 안전관리 소홀 감찰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시설인 유치원, 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화재 등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전에 소홀하거나 시설주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관련 시설 마련을 소홀히 하거나 점검을 해태하여 사고를 대형화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 유치원, 어린이집 안전기준 미준수, 시설 안전기준 미준수, 소방훈련 허위실시
- 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스프링클러 미작동, 시설 안전기준 미준수

### 실행과제 ②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단속

- 극장, 터미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유동인구가 많고, 시설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다수인명 사상 우려가 큼
- 공공시설이 아닌 관계로 안전관리가 시설사업자에 맡겨져 있어 효율의 측면을 강조하다보면 이용객의 안전을 등안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요구됨
-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소방 점검 허위보고
- 비상구 개방의무 미이행

## (3) 안전을 위협하는 토착형 비리 근절

### 실행과제 ① 해수욕장 안전무시 관행 단속

- 우리 도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면적이 넓어 여름철 행락객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 해수욕장은 계절적 특수를 이용해 관련 시설이나 물품 등이 임시로 판매 또는 임대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사업에 따른 법규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이용객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함

-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 사업 인허가 부정
- 무자격 안전관리자 고용, 위탁고용

## 실행과제 ② 재난안전 사업에 지역 토착형 비리 집중 단속

- 인허가권자인 자치단체와 유착된 지역토착세력에 의하여 각종 사업 운영의 부실한 관리와 예산낭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음
- 재난 발생 시, 또는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급공사의 비리 문제는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재난의 추가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전의 심대한 위협이 가해지는 문제로 인식해야 함
  - 지역 건설사 등과 관련된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쪼개기 발주
  - 허위준공 등 부실관리 실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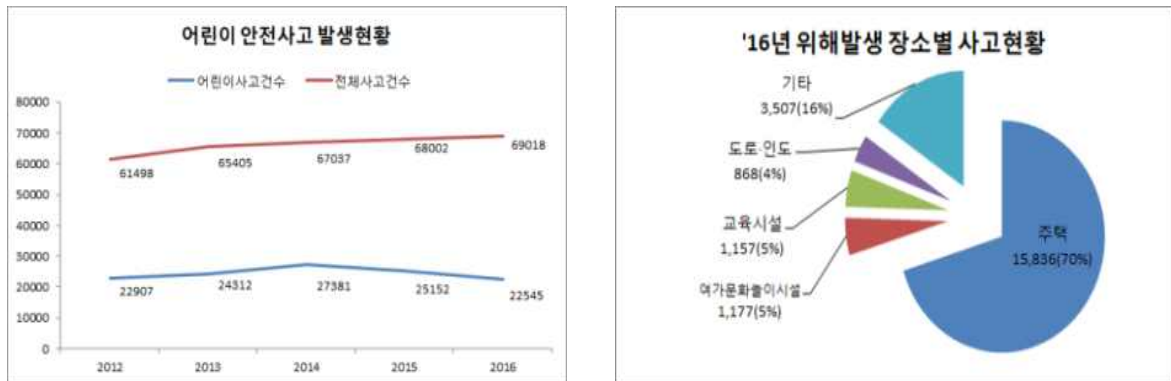
## 2. 선도사업

### 어린이 생활공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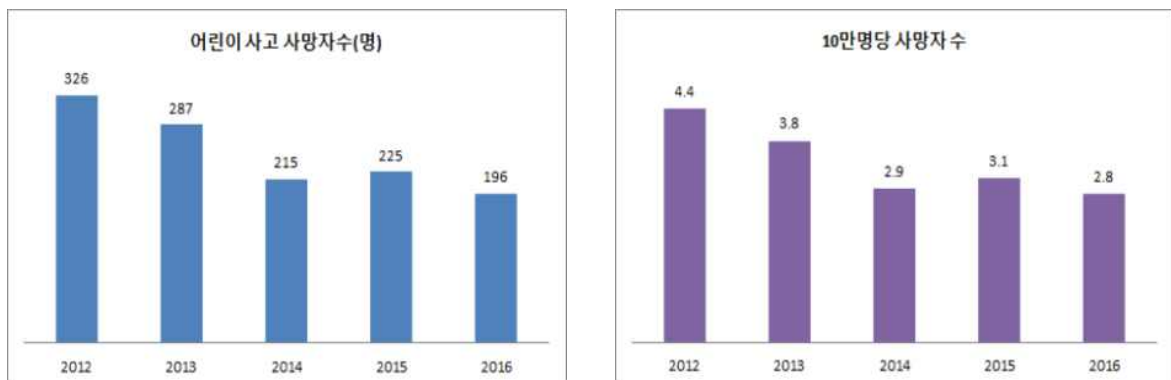
-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점차 확대·강화되고, 어린이를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 저출산 시대에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린이 안전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증가하며, 도정 목표와도 부합함
- 정부는 '17년 10월에 어린이제품·놀이시설·식품분야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1학년)이 버스에 치여 사망('18년 4월)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 분야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각지대의 보완이 필요함

- 사고 장소별로 살펴보면, 어린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택(70.2%)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여가·놀이시설(5.2%), 교육시설(5.1%), 도로·인도(3.9%) 순으로 발생



[그림 2] 2016년 위해발생 장소별 사고현황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OECD국가 중 중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사고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그림 3]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국내)

-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수 OECD 순위 : ('12) 8위/35, ('13) 10위/34, ('14) 11위/28 ('15년의 경우, OECD 자료 부족)

- 사망원인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44%)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아, 어린이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는 교통사고 집중 감축 대책이 필요

## (2) 사업 제안

### ● 키즈카페 점검 강화를 위한 안전감찰 활동 제안

- 유원시설업 및 식품접객업 등록대상 여부 조사
- 안전점검과 놀이기구 설치검사 미이행 등 법령위반사항 조사
- 유키기구 및 놀이기구 분야에서는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안전교육,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 비상구 장애물 적치 여부 단속

## 07 결론

### 1. 요약

- 이상에서는 안전 환경 진단과 대형사고 원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도가 2019년 안전감찰활동을 위하여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함
- 사회시스템의 변화와 기술수준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신종재난의 증가와 대형재난 확대로 이어졌으며,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비율이 확대됨

#### ● 급증하고 있는 대형사고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됨

- 첫째,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 및 감독 부실
  - 둘째, 안전관련 시설·장비 투자 및 안전의식 부족
  - 셋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의 관행화
  - 넷째, 재난관리에 임하는 정부기관의 소극적 대처
  - 다섯째, 비리와 부실이 정상이 사회 풍조
- 
-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지적되는 안전부패유형과 우리도의 안전신문고 신고사례, 도민의 견수럼 결과를 종합하여 만연한 생활 불법 요소를 찾아 처벌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함
  - 특히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한 사례를 돌아보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위험관리 부담과 책임에 대한 전가문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안전을 담보로 한 사익 추구 행태를 지적함

## 2. 안전감찰 기본계획의 방향과 전략

- 안전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으며, 안전을 해치는 불법관행을 근절한다는 방향 하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패유발 구조를 추적하여 도민의 안전감수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 추진전략

- 첫째, 신뢰회복을 위한 안전직거래 유도
- 둘째, 안전에 우선하는 이익 방지
- 셋째, 안전을 위협하는 토착형 비리 근절을 설정함

### ● 실행과제

- (1)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직거래 유도
  - 중소규모 건설사업자 안전관리 소홀 및 하도급 부정부패 감찰
  - 재난발생 시 비상근무 매뉴얼 불이행 감찰
- (2) 안전에 우선하는 이익 방지
  - 어린이, 아동, 노인, 장애인 생활시설 안전관리 소홀 감찰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단속
- (3) 안전을 위협하는 토착형 비리 근절
  - 해수욕장 안전무시 관행 단속
  - 재난안전 사업에 지역 토착형 비리 집중 단속

### ● 선도사업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정의 방침에 부응하고, 안전취약계층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우선하고자 어린이 생활공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함
- 특히 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키즈카페에 대한 점검 강화를 제안함

## 참 고 자 료

---

- 감사원. 감사총괄 및 안전분야 감사사례(총괄). 20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2014.
- 고민서. 재난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 연계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17.
- 안전행정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2014.
- 한국방재협회. 안전혁신마스터플랜. 2014.
- 행정안전부. 안전부패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2018.
- 행정안전부. 범정부 안전부패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8.